

# 민주, '한국판 IRA' 만든다... "반도체 세액공제 다룰 것"

### 김성한 "초안 마련...전문가 의견 수렴 중"

### 지역화폐 의무 지원 등 민생 법안 발의 속도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다룰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김성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판 IRA'와 관련된 질의에 "초안이 마련된 상태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번주 중에는 어렵겠지만 미루지 않고 입법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IRA를 통해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산업을 미국 내에서 하라고 하고 있고, 유럽도 이에 상응하는 유럽판 IRA를 만들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을 혁신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과 세제 혜택을 담은 법이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반도체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세액공제 폭이 최대 30%에 달할 것이라는 말도 돈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혜택이 늘어난 것이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개별 산업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로 지원할지 여부는 조세법에 담을 내용"이라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법안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물가·금리·실업·부동산 문제를 '4대 민생 쟁점'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단을 꾸린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음주 중에 경제위기대응특위 산하에 4대 쟁점 처리 방안 대응단을 구성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관련 입법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관한 법은 이동주 의원이 발의했고, 에너지 지원과 관련해서 오늘 윤관석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라며 "고금리 대책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의무 지원 관련 법안도 내용을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툭다운이 아니라 바탕업 방식으로 지자체가 (지역화폐 관련)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시기에 대한민국



이 다른 나라보다 국가재정을 조금 쓴 탓에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정부 지원은

필수적이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추경 등 전형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타당하다"고 전했다.

최이슬기자

## 서동욱 의장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온 힘"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6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비전 선포 2주년' 기념행사와 탄소중립 정책 포럼에 참석해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집중호우와 이상고온,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가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를 덮치며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의 위기는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삶의 위협 또한 더 커지고 있다"며 "탄소중립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로 더 늦게 전에 하루빨리 탄소중립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은 전국 최대 태양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최적지이다"며 "전남도의회 또한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탄소중립 실천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비전 선포 2주년 기념행사는 서동욱 의장을 비롯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와 축사, 탄소중립위원회 위촉장 수여 등의 순서로 전개됐다.

이어진 탄소중립 정책포럼은 탄소중립과 전남의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전의찬 세종대 석좌교수가 기조강연을,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실장과 이재운 산업연구원 실장이 주제발표를, 김종일 전남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 이재명 "日 강제동원 배상안은 '계묘늑약'...최악의 외교 패착"

### 평화·안보 대책 회의...정부 3자 배상안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을 두고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적 패착이자 국치"라며 "국가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 상처를 두 번 해주는 '계묘늑약'과 진배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저버리고 일본에 머리를 조아렸다"며 "새 사죄를 받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인지만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 년간 투쟁한 피해자가 원하는 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이라며 "가해자의 사과도 없이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건 불의이고 비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는) 소위 말하는 '다케시마의 날'에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미국과 일본이 훈련 후에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해도 항의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일본의 재무장을 무비판

적으로 용인하고 미국과 일본의 봉쇄정책 아바타를 자처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자칫 대한민국이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 일본의 발발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했다"며 "일본이 지금처럼 과거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과연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겠나. 정부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고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면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굴종이고 처욕이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위원장인 이인영 의원은 "(제3자 배상안) 해법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고 제2차 경술국치,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며 "역사는 윤석열 정부를 매국, 위헌, 친일의 길로 간 정부라고 기록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의 불법

성을 적시하고 전범기업이 배상하게 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고 파괴했다. 한마디로 헌법질서를 유린한 것"이라며 "일본 식민지배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면 주권국가로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라 팔아먹은 제1차 매국에 이어 역사 팔아먹은 제2차 매국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똑똑히 듣기 바란다"며 "신(新) 친일의 길로 가는 정부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는 식민지 시대였던 그때나 지금이나 나를 지켜주는 국가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다"며 "지금도 일본이 강제로 용서를 강요하는 상황에서서도 국가가 붙잡아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수출 규제가 풀리기도 전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중단을 발표했다"며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도 먼저 풀겠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밝히지 않을까 상상하게 된다. 오늘의 대한민국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국가도 대통령도 없어보인다"고 덧붙였다.

오유니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